



보도시점 2026. 4. 11.(토) 12:30 배포 2026. 4. 11.(토) 11:30

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,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

신속집행 대상사업(10.5조원) 상반기내 85% 이상 집행

- 임기근 차관 국무회의 직후 「긴급 집행점검회의」 개최, 추경 즉시 집행 위한 세부 추진계획 점검
-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국민 체감 민생사업 중심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도모

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.11일(토)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「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: 재경부, 과기부, 교육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기후부, 노동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국세청 등

정부는 중동전쟁 발발(2.28) 후 민생 안정 및 기업·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(안)을 국회에 제출(3.31)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·확정되고, 4.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(안)을 상정·의결하였다.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·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·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,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.2조원 중 25.0조원¹⁾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,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.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‘상반기 내 85% 이상 집행’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. 특히, 고유가 피해 지원금, 에너지바우처,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·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.

1) 국채상환(1조원), 국채이자상환(0.1조원), 지방채 인수(0.1조원) 등 제외

사업별로 보면, **고유가 피해지원금**(행안부)은 지급일정(1차 4.27일, 2차 5.18일)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**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%**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. **긴급복지**(복지부)는 **4월중**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, **저소득 위기가구 요청**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영화·공연·숙박 할인 지원(문체부)은 문화·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**5월 영화·공연, 6월 숙박 할인**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.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**에너지바우처**(기후부)는 기존 등유·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**4월부터 순차 지급**하고, **대중교통비 환급**(국토부)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**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**하여 **5월 중 환급**을 추진한다.

또한,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**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**(산업부)은 **4월 중 지원기업**을 선정하여 **나프타 수입금액**을 지원하고, **석유비축사업**(산업부)도 **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**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**비축유 적기구입**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
한편,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**예비비와 지방교부세(금) 등 14.4조원**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하여 **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**.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임 차관은 “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”이라며 “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,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 없이 움직여 달라”고 당부했다. 아울러, “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,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정부는 금일 확정된 **2026년 추경예산 신속집행 계획**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**2주 단위로 집행 상황**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,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, **민생·산업 피해지원**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**현장 방문**을 병행하여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	책임자	과 장	김남희 (044-214-3270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인 (nki1213@korea.kr)
			사무관	신형진 (hj8147@korea.kr)
			주무관	김유빈 (7ybkim@korea.kr)
담당 부서	교육부 예산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아영 (044-203-6033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혁 (jhpark12@korea.kr)
	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서기관	강민철 (kmc0608@korea.kr)
	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조성제 (044-203-2231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용 (lsystyle@korea.kr)
	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손용하 (044-203-552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택 (hit21@korea.kr)
	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은정 (044-202-2320)
		담당자	사무관	오상철 (chori73@korea.kr)
	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	책임자	과 장	이채원 (044-201-6950)
		담당자	사무관	양동춘 (y10956@korea.kr)
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영범 (044-202-7026)
		담당자	사무관	김봉중 (bzang@korea.kr)
	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허경민 (044-201-3238)
		담당자	서기관	배윤형 (masterkeator@korea.kr)
	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하녕 (044-204-7320)
		담당자	사무관	윤상준 (redragun@korea.kr)

별첨

'26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관리 계획

- ◇ 추경예산 총 26.2조원 중 집행관리 실익 있는 25.0조원 관리*
 - * 국채상환(1조), 국채이자상환(0.1조), 지방채인수(0.1조) 등 제외
 - (신속집행 관리) 10.5조원 대상, 「상반기 내」 85% 이상 집행
 - (집행상황 관리) 14.4조원 대상, 자금배정 및 집행상황 관리

- ① (추진경과)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총 26.2조원 추경예산 확정
 - 중동전쟁 발발(2.28) 후 31일 만에 국회에 제출하고(3.31),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·확정, 4.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(안) 의결

② (집행 관리)

- (신속집행 관리)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.5조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내 85% 이상 집행

< (참고) '26년 추경 분야별·주요사업별 신속집행 목표 >

추경 주요 분야	추경 (조원)	상반기 (%)	9월 (%)	12월 (%)
신속집행 총계	10.5	85	95	100
① 고유가 부담 완화	5.3	96	98	100
· 고유가 피해지원금(행안부)	4.8	99	99	100
·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(국토부)	0.2	75	100	100
· 에너지 바우처(기후부)	0.01	85	100	100
② 민생안정	2.5	66	87	100
· 특별경영안정자금(중기부)	0.3	41	70	100
· K뉴딜 아카데미(노동부)	0.1	30	70	100
· 영화정책지원(문화부)	0.03	100	100	100
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	2.7	81	95	100
·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(산업부)	0.7	100	100	100
· 긴급경영안정자금(중기부)	0.3	36	100	100
· 석유비축사업출자(산업부)	0.2	100	100	100

- (집행상황 관리)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교부세(금) 9.4조원 및 예비비 5조원(석유 최고가격제 등)은 자금배정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
- ③ (향후 계획)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(2주) 점검하고,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, 민생·산업피해 지원 등 핵심사업 현장방문 병행